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헬스케어 서비스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헬스케어 산업계에서도 새 정부 출범의 영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당선자가 매 번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며, 이러한 형태의 정부 서비스가 실제 정착하는 경우 국민들이 가장 효용성을 체감할 분야가 헬스케어 영역이기 때문이다.

당선자의 공약 중 바이오헬스 메가테크 육성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 역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얼마 전 본격 개막한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에 이어, 지금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마이헬스웨이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물론 현재에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에 대한 진료 및 투약 정보,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 정보를 개인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나의건강기록(PHR) 서비스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이헬스웨이는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 취합을 넘어 의료기관이 직접 상세한 진료내역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통합되어 건강관리나 질병 예방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이 용이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공공 주도의 데이터 통합과 제공, 관리를 기초로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나 AI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곧 펼쳐질 수 있다.

마이헬스웨이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비대면진료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선자의 공약 중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이나 비대면 진료의 확대(시범사업)은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 해결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개인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놓치기 쉬운 과거력, 가족력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진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는 쉽게 예상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 제공의 다양성은 비대면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정부 집중을 기초로 하며, 정보의 오남용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가 이루어



어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다수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생체정보의 국가 보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실제 법안의 목적을 떠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점차 발전하면서 소위 빅브라더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넘어 현 신용정보법과 같이 정보 활용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안전 의무 부여, 국민의 절차적인 권리 강화, 동의체계의 고도화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이 좀 더 쉬워지고, 사업자들 역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익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ibae@lkpartner.co.kr